

西獨의 이데올로기教育

— 民主主義의 定着과 育成을 위하여 —

申 龍 澈
(慶熙大 史學科)

西獨은 이데올로기교육의 場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즉 학교, 사회, 정당 등에서 民主主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적인 향상을 긍정하고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했던 모든 요소들을 찾아서 비판하고, 배제하고 있다.

1. 主題의 提起

그 개념 정의에 있어서조차도 긍정 및 부정의 상반된 측면을 갖는 Ideology(독어로 Ideologie) 문제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매우 자주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데올로기의 비판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개념 속에는 ‘허위의 의식 형태’ 혹은 ‘그릇된 의식 형태’란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음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비판’을 빼고 그대로 ‘이데올로기 교육’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만 파악할 수 있는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교육이란 원래 가장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 인간의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의 연속이라고 할 때 그릇된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고 믿는다.

오늘날의 세계가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양대진영에 의해 분할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세계사상 그 유례가 없었던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열이란 의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열된 세계의 축자이 되는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부 유럽의 독일이다. 한국의 휴전선에 있는 판문점이나 독일의 베를린장벽에 있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성문은 이 시대의 비극적인 상징이다.

이처럼 분열된 세계 속의 분단된 국가인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이데올로기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여러 비슷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니, 이는 양국의 역사와 문화 및 현실의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한국이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적 방향의 이념으로 규정하여 비판하고 있는데 비해, 서독은 그 문체에 대해서 훨씬 소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서독의 태도가 분단된 다른 편의 정치적 현실이나 이데올로기를 긍정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그들은 한국과 같이 불행한 동족간의 전쟁을 겪지 않았고 상호간의 교류가 분단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더구나 19세기 이래 오늘날까지 이미 2세기 동안이나 이데올로기 문제와 부딪쳐 왔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복잡하고 난해한 이데올로기의 개념적 정의나 장구한 역사적 고찰을 피하고, 인류사상 최선의 정치제도라고 인정되는 民主主義를 긍정하고 그에 대한 발전을 위한 노력 또는 교육에 본문의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를 위해 그의 발전과정과 그에 대한 역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장애가 비판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西獨 이데올로기教育의 現代史的 배경

19세기초 프랑스의 드 트라시(Tracy)에서 개념의 기원을 찾는 이데올로기는 그 뒤 곧 독일에 전해져서 신성로마제국의 분열된 혼란 속에 있던 그들에게 自由·平等의 이상적인 이념으로 인식되어졌다.

그 당시 독일인들에게는 이데올로기가 프랑스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언론자유 등을 비롯하여, 헌법제정, 원리원칙에 입각한 인간, 유대인 해방 등으로 인식되어졌고,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오히려 정치적인 비난어른 의미하기도 했다. 즉 독일은 불행하게도 영국, 프랑스와는 전혀 반대로 전제국가의 방향에서 통일이 성취된 것이다.

그 후 독일의 사상가 카알 마르크스는 헤겔적 관념철학의 비현실성을 이데올로기라고 공격하면서, 그의 반자본주의적이고, 계급 투쟁 및 유물사관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다.

한편 마르크스의 사상이 제 1차 대전 후 러시아에서 최초의 공산국가를 탄생시킴에 따라 독일내의 정치 및 이념의 방향은 더욱 혼란과 북

장성을 더하였다. 제 1차 대전 후 단명의 바이마르(Weimar)공화국(1919~1933)은 보수적인 극우파와 급진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그의 명맥을 겨우 유지해 갈 수 있었는데, 당시 그들의 이념은 불투명하나 사회민주주의(Sozialdemokratie)란 중간노선을 택한 것이다. 공화국의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F. Ebert(1871~1925)에 의해 영도된 사민당은 오늘날의 社會民主黨의 선구로서 급진적 좌파의 계급 투쟁과 사유재산의 폐지란 정책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히틀러의 출현으로 1945년까지 독일은 반대로 극우파의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의 갈등속에서 제 3제국은 제 2차 대전의 패전과 함께 독일에 커다란 불행을 안겨 주었다.

제 3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바이마르공화국 때조차, 패전으로 인해 독일이 강요당한 '개목걸이' 정도로 민주주의를 보았음은 고난에 찬 독일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잘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서독)은 역사상 최초로 국민의 합의에 의한 민주주의에 도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제 2차 대전의 패배에 따른 부산물적 성격을 갖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바이마르공화국 때처럼 부정적인 시각이나 평가를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민주주의에의 도달은 2세기간의 역사적 산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민족과 국가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란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했으니 자기들의 사상을 통한 대립이란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라고 보겠다.

어쨌든 오늘날의 서독은 역사상에 그렇게 갈구했던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시켰고, 사회복지를 최미한으로 실시하는 자본주의적 自由民主主義를 성취하였다. 오늘날 서독의 중요 정당인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 자유민주당 및 사회민주당의 당명에서 그들의 정치적인 미래사회에의 지향점을 이해할 수 있다. 사민당의 사회민주주의조차도 동독, 소련 등에서 아주 싫어하는 대상임을 보면 양대진영의 틈바구니에 갇힌 서독의 이데올로기적 위치와 고뇌를 여실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데올로기教育에 관한 考察 범위

이데올로기교육도 역시 일반적 교육의 범주에 속하므로 교육의 속성대로 유형·무형의 광범위한 영역을 갖게 된다. 즉 협의로 교육의 場인 학교뿐 아니라 교육에 관계된 사회의 모든 공간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본론에서는 광범위한 고찰이 불가능하므로 학교의 교육 중 우선 사회 및 역사과 교과서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政治教育의 측면이다. 정치교육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지난날 제3제국의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격이나 정부의 강요 같은 인상을 주지만 오늘날의 독일에 있어서는 훨씬 부드럽고 민주적이다. 즉 그들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과 옹호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집중되고 있다. 정치교육이란 원래 “바른 현실 인식 위에서 구성원의 사회생활 전체를 포괄하여 사회적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과 공동체의 목표 설정에 맞는 생활 양식을 의식화시키는 종합적 세계관의 교육”으로서 훌륭한 이데올로기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비정치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매우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것까지도 자주 포함한다.

이들의 정치교육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가치관과 세계관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특수한 人間像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 실현을 보장해 주면서 民主主義 체제의 正當性을 긍정하도록 꾸준히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민주주의 체제와 사회 현실에서 잘 보존해야 할 것과 배격해야 할 것 등을 비판 의식을 갖고 스스로 판단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교육을 위해서 중앙의 Bonn에는 ‘聯邦政治教育研究所(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를 두고 각 주에는 ‘州政治教育研究所(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를 두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구의 설립 취지는 “독일 국민에게 정치적 제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일깨우고 民主意識을 확고하게 하며

자발적인 정치참여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교육의 또 다른 형태는 각 정당의 정치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국가나 연방의 정치교육에 비해 자기 정당의 理念을 구현시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어느 정당이건 민주주의 체제의 원칙이란 점에는 모두 일치하고 있다. 이들 정당 중, 이미 1863년 이래 오늘에 이른 최장의 역사를 가진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의 정치교육과 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서독의 公報部(Ministerium für Presse und Information)가 발행하는 각종의 저서, 잡지, 팸플릿 등으로 이데올로기교육에 관계되는 것도 그 고찰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4. 이데올로기教育의 내용

1) 사회 및 역사과 교과서

국가가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위해서 중등학교의 사회 및 역사과 교과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문고등학교(Gymnasium) 7~10학년용 대상으로 쓴 「一般社會」(Sozialkunde, 1972)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한다.

우선 서문에서 저자는 “학생들에게 정치적·사회적·법적·경제적 사실들을 알려 주려 하며, 서로가 관계없는 지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술하여 비판적 태도를 높여 주려고 노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① 사회는 相衡되는 利害의 場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② 각자의 문제점을 알려야 하며, ③ 가능한 한 여러 개의 해답이 요구되며, ④ 정치적인 상충에 맞게 토론해야 하며, ⑤ 문제를 비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그 목차는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현실감과 생동감을 보여 주고 있다. 즉 ① 自由와 抑壓간의 사회적 문제로서의 人間, ② 정치 질서의 기본 문제, ③ 정부 조직, ④ 法과 우리들의 공동생활, ⑤ 경제와 사회, ⑥ 독일연방공화국(서독), ⑦ 공산주의, ⑧ 中共, ⑨ 東獨, ⑩ 제3세계, ⑪ 平和와 安定 등이다. 그 중의 소제목으로 우리들에게 인상적인

것은 ‘모든 인간의 다양한 역할’, ‘청소년들의 반항’, ‘범죄—왜?, 형벌—무엇 때문에?’ ‘모든 것은 그의 값을 갖는다’, ‘산업화와 프롤레타리아트’, ‘카알 마르크스의 교설’, ‘사회주의란 이론하의 독재’, ‘동독의 생활수준’ 등이다.

이 책의 저자가 서문에서 말한 비판의식을 통한 논의 및 해답의 문제는 다른 상급학년의 「世界史」(Geschichtliche Weltkunde IV, 1982)에서도 “우리는 역사에 대하여 계속 질문하며 한쪽만의 대답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역사에서도 말할 수 있는 인간성의 존엄의 자유와 가능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서와 세계에서 모든 위협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보호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다시 요구되고 있다.

전체가 14장으로 된 이 역사 교과서에서는 3장 바이마르공화국—혁명과 반혁명간의 공화국, 6장 제3제국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종족설과 생활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다아원주의 등 오늘날의 서독을 ‘복고와 개혁간의 공화국’이라 한 것은 아주 인상적이다.

東獨에 관한 11장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의 국가 건설을 기술하고, 1953년 동독의 공산정권에 항거하는 데 시위를 소개하며 동독은 그것을 ‘반혁명적 구테타’로 규정하고 있음도 지적한다.

1949~1961년 베를린장벽 구축까지 계속 증가한 피난민의 통계를 제시하고 장벽 구축 후의 동독 사회계층 분석 및 소비품의 통계로 서독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학문·경제·기술 면에서 낙후된 동독 국민들의 실망은 이데올로기와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분단국가로서의 서독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편의 통일정책 및 민족·국가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1973년 동·서독간의 基本條約(Grundvertrag) 후 동독은 서독에 대한 “침략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국가”라는 종전까지의 비난을 훨씬 약화시킨 반면 서독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경계(Abgrenzung)를 더욱 강화시켰음을 지적하

고 있다. 즉 1974년에 개정된 동독의 헌법은 1968년 제정된 헌법에 비해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은 소련과 항상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동독은 불가분의 사회주의국가적 구성원”임을 추가함으로써 소련의 주도적 세력에 더욱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현대사 서술은 서독 국민에 대해 동독의 소련관계 및 비민주적이고 이상에 머무르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실로 하나의 허구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서독은 서유럽의 결합을 강조하여 유럽공동체(Europäische Wirtschaftliche Gemeinschaft)에 대해 긍정하고 그 발전을 기술한다. 따라서 1949년 이후 유럽공동체의 발전을 돌아보고 오늘날 크게 증가된 회원국의 범위나 경제적 단위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시장경제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를 주고 있다.

이러한 중등학교의 사회 및 역사과 교과서 속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교육의 입장과 내용은 우리에게 비해 훨씬 간접적이고 소극적이며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政治教育研究所

정치교육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이 연구기관의 중앙에 있는 ‘연방정치교육연구소’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에 관한 학회, 회의, 기타 연구의 보고를 수록하여 일련의 총서인 「연방정치교육연구소의 문헌 *Schriftenreih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을 내고 있는데 1984년까지 이미 210호의 저서가 나왔다. 이 연구소에서 나오는 또 다른 정기간행물로서 주간지인 의회신문의 부록으로서 「政治와 現代史에서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가 약 70p 정도로 매우 수준 높은 연구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총서 중에서 몇 가지의 제목을 보면 「독일 역사 교과서에 있어서 유대인」(173호), 「학교 정치교육의 상황」(185호), 「(양) 독일의 동질성」(200호) 등이 있어 현실과 불행한 역사적 유산

에 대한 반성과 현실 긍정이 엿보인다.

또 다른 얇은 책자인 「政治新聞 *Politische Zeitung*」이 있는데 「現代生活과 공존」(17호), 「미국은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31호), 「제한된 희망을 가진 社會」(19호), 「할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은 있다 *Opa ist allem Schuld*」(29호) 등이 있는데, 19호의 경우 미래를 위한 역사의 회고이며, 특히 29호가 깊은 인상을 준다. 즉 그 표지에 히틀러 소년단의 한 소년이 나치의 제복을 입고 오른 손을 쳐들고 서 있는데, 그 밑에는 나치군의 총검 앞에서 공포에 질려 두 손을 울리고 있는 다른 소년의 사진을 실고 있다. 그들의 나치와 극우파에 대한 경계와 역사적 평가인 것이다.

또 다른 출판물인 「政治教育情報 *Information für Politische Bildung*」도 그의 표제를 「바이마르공화국」(109호),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123, 126, 127호), 「이스라엘국가」(141호), 「日本」(147호), 「유럽공동체」(154, 155호), 「19세기—군주주의—민주주의—국민국가」(16호), 「中共」(166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178, 184호), 「동·서독」(192, 193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도 이데올로기에 휘말렸던 바이마르공화국, 위험한 민족주의인 나치의 제3제국,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실상과 문제점 등을 통해서 민주체제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각 州에 설치되어 있는 「州政治教育研究所」는 각 주 나름대로 독자적 교육내용처럼 다양하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독교민주당이 통치하는 슈트트가르트와 바덴 뷔르템베르크주를 보면 「政治와 授業 *Politik und Unterricht*」이란 소책자에도 「독일문제」, 「평화교육의 측면」, 「제3제국의 저항」, 「예술」 「미래」등 이데올로기는 물론 정치교육과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보이는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 시각을 넓힐 때 역시 오히려 훌륭한 정치교육이나 이데올로기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3) 政黨의 政治教育

政黨이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니 그들의 정치적 이념은 곧 그 국가·사회

의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필자가 본론에서 현존하는 서독의 중요 정당 중 사회민주당의 정치교육을 약간 고찰해 보기로 한 것은 시민당이 1863년 창당되어 가장 역사가 길고 극좌파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택한 때문에서이다.

시민당의 정치교육은 그 당의 최초의 집권자로서 바이마르공화국을 定礎했던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이름을 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 Ebert Stiftung)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교육은 전국에 산재한 ‘향토국민학교(Heimvolkshochschule)’에서 1년을 통해 2~7일간 계속되고 있는데 당원은 물론 당의 이념과 교육의 취지에 찬동하는 일반인 및 그 재단의 장학금을 받는 독일 또는 외국 학생들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세미나의 주제에 관해서 당원, 공무원, 회사원, 노동자, 학생들이 함께 거거하고 생활하며 토론하게 된다. 교육기간을 노동자는 유급휴가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시민당의 정치교육 목표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의식을 국민의 각 계층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평가함에 비판적 의식의 발전과, 사회조직체 속에 있어서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재단의 정치교육세미나에서는 시민당의 역사는 물론 독일의 현대사 또는 사회문제로서 ‘동·서독 문제’, ‘제3세계 문제’, ‘에너지 문제’, ‘청소년 문제’ 등의 현실적 쟁점들이 취급되고 있다.

그들의 정치교육세미나의 주제를 보면 ‘자유로운 언론을 통한 정치적 행동’,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론 및 실제’에서 改革 혹은 革命, 의회민주주의와 견제국가 혹은 인민공화국 등을 논한다. 특히 ‘독일 민주주의의 전제’에서 독일 역사에서 반민주전통과 가치의 파괴 또는 바이마르공화국을 통해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웠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民主主義에 있어서 改革政治」에서는 생활 및 사회질서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安定과 自由간의 緊張,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에 대한 언론정책, 시민의 참

여와 영향력의 한계 등 아주 흥미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에너지 문제로 '환경과 質의 成長'에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의 커다란 관심사인 '동·서독 관계'에서 사회질서를 상호 비교하고 동·서독간의 관계와 유럽간의 협력 문제가 거론된다. 그와 관련해서 국제정치에 있어서 동독의 역할, 동독과 동독 공산당의 서유럽 공산당과의 관계, 양 독일의 정치와 사회 구조, 동·서독일 분열의 원인, 1973년 기본조약 후 양국의 정치와 관계발전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민주적 유럽에의 길'에서는 유럽의회의 업무, 유럽 통합의 역사와 전망을 다루며, '평화정책—평화교육—평화연구' 등도 여러 차례 핵심한 전쟁에 시달린 독일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테마가 된다.

위에서 본 정치교육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분류해 보면, ① 민주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발전의 이해, ②역사상이나 오늘날에 있어서 自由民主主義의 적대자인 나치 같은 극우파, 소련 같은 극좌파의 경계, ③ 현 독일연방공화국의 합법성과 현실 인식, ④ 서독과 관계가 많은 주변 및 세계 주요 국가에 대한 지식 전달, ⑤ 유럽 통합 및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실과 문제의 이해, ⑥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의 고양과 설계 등이라고 하겠다.

4) 공보부 또는 언론기관의 매체교육

서독 정부의 공보부에서 국가활동의 중요한 내용을 홍보하는 많은 출판물을 간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의 역할은 물론 현실과 미래에의 분석과 전망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위탁으로서의 民主主義」란 책은 30년의 서독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재의 서독을 共和國—民主主義—社會福祉的 國家—聯邦國家로서 규정 하던서 법치국가, 시장경제, 사회복지적 입법, 평화의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독일 관계의 분석'에서는 문제점과 전망을 고찰하면서, 양독관계가 '평화적 공존'인가 아니면 '특별한 관계'인가를 묻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역사는 경고한다」는 소책자에서는 1933년부터 1983년간

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R. 폰 바이켄커 현 서독 대통령, W. 브란트 전 수상, H. 콜 현 수상 등의 연설문을 실고 있다. 특히 동방정책을 통해 동구 및 소련의 공산진영과 화해를 추구하여 뒤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가 1970년 바르샤바의 유대인 수용소에 무릎 꿇고 헌화하는 사진을 실고 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는 책에서는 대기 문제, 청소년 문제, 교육 문제, 가족 문제 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처럼 서독의 이데올로기교육은 좌절의 역사 속에서 어렵게 얻은 民主主義에 대한 옹호와 그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 정부간행물을 통해서도 실시되고 있다.

5. 맺는 말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이데올로기의 개념이나 그 교육에 대해서 필자는 너무 소박하게 다루어 차원 높은 理論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개념 및 인식과 크게 다른 서독의 현실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역사적 연속성의 한 부분으로서의 현실 인식은 그 자체가 이미 미래를 향한 또 다른 역사적 연속성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상기하려고 노력하였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이건 또는 그에 적대하는 이데올로기이건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훨씬 덜 전형적이며 덜 강제적이며 덜 적극적이라고 하겠다. 서독의 이데올로기교육도 이러한 측면에서 요란스럽지 않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듯하다. 필자가 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서독은 19세기초 이래 실로 오랫동안 투쟁과 좌절을 거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데올로기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즉 학교, 사회, 정당 등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적인 향상도 긍정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방해했던 모든 요소들을 찾아서 배격하고 비판하고 있다. 낡은 보수주의나 강력한 극우적

민족주의 등이 그에 속한다. 한편 마르크스 사상의 극단적 좌파로 향한 오늘날의 동구권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비판한다. 이 후자는 바이다르공화국이나 제3제국의 과거 문제뿐 아니라 현재의 분열된 동구 세계의 전경하고 있다는 데서 더욱 현실감을 갖는다.

따라서 간단히 말한다면 民主主義를 서독 사회에 올바르게 定着시키고 그를 育成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데올로기교육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매우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니 민주주의의 정당성

이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과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세계관을 길러 주고 총괄적으로 평가하며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1년간에 수 백만의 여행자가 동부 베를린이나 동독의 생활과 社會를 보고 느끼는 것 같은 형태는 매우 중요하고 설득력이 크다고 하겠다.

인간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요건인 自由와 향상된 生活水準이란 면에서 兩獨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긍정하고 미래를 설계하게 하는 것은 서독 이데올로기교육의 특성이며 최선의 교육방법이라고 믿는다. *